

광남일보

GwangNam.co.kr

조간 제800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음력 11월 20일)



여의도포커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시도통합 먼저 하는 곳 우선 지원이 정부 원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7일 오후 광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에서 시도통합과 관련해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추진하는 곳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이 중앙정부 원칙”이라며 “광주전남이 앞서 가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이번에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 ‘시·도 간 통합을 하면 저런 혜택이 주어지는구나’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금이 균형발전을 성공시킬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정책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다. 이번에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다. 성공시키지 못하면 다음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 버렸다. 그런 상황이 한 20년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기업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전력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전부 지방이다. 수도권에는 둘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그냥 데이터센터만 가지고는 지방의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기는 어렵다. 실제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 리트머스 시험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성공시키는 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됐다. 수도권 1극을 가지고는 AI 시대에 대한 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지방을 함께 살려야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단체의 장점과 지원 정책은.

△현재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지역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집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도권 3개를 빼면 14개의 비수도권 시·도인데 모두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없다. 중복과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지역에 별로 없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거다. 이제는 미래 산업과 첨단 산업, 성장 동력 산업들이 지방에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빠져 있는 구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 양성 체계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건 기업이 할 수 없다. 정부가 붙여줘야 된다. 연구개발(R&D) 집중과 규제 완화도 국토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수도권처럼 다른 지역도 도시와 도시를 권역 단위로 연결해 줘야 한다. 그래야 권역 단위의 경제권이 생긴다. 의료 문제 역시 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 권역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5극 3특은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다. 첫 번째 핵심은 수도권처럼 지방도 경제권과 생활권을 권역 단위로 육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다. 처음에는 광역연합 구성을 요청해오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불이 붙어버렸다. 원래 목표는 연합을 거쳐서 행정 통합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대전·충남을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행이 되니까 광주·전남 입장에서도 연합으로 기다라 ‘이쪽으로 가자’가 된 거고 부산 경남도 추진해 왔던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연합과 행정통합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와 상승 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광주·전남만 해도 사실 연합을 만드는 데 전통이 있었다.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아니나 그걸 설득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연합이 다 합의하고 나니까 다음에 통합까지 가는 게 훨씬 쉬워졌다. 중앙 정부가

은 국가 AI 센터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해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같은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그 분야를 집중하면 굳이 수도권에서 사람을 안 뽑아도 된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에서 5년간 14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대기업들에게 용인에 투자하는 600조원을 제외한 80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전엔 지방투자를 하는 시늉만 하던 대기업들은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겁지를 함께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계속 발표도 나오고 성과들이 나올 것이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반대 여론도 많다. 정부 대처는.

△대전 충남이 제일 앞서 가다가 지금은 광주·전남한테 뒤쳐졌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하고 협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속도를 낸 건데 막상 속도를 내니 국민의힘하고 대전 시장이 움찔하는 거다. 지

토교통부가 올해 이런 원칙과 함께 또 다른 논의를 통해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분권 관련 정부 진행 상황은.

△재정분권은 국무조정실 총리실 산하에 재정분권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재정 분권이 변죽은 많이 올렸는데 결과는 미흡했다. 재정 분권만 다른다고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하고 같이 두 바퀴로 굴려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지방세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할 거나 6 대 4로 할 거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방세만 올리면 수도권만 좋아지고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다.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본사도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실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정 분권을 추진하되 과도기적인 단계에는 교부세 같은 ‘공동세’를 겸여서 지방에 가능한 한 많이 배정을 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방에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균형발전과 함께 가고 국세·지방세 조정은 권역별로 성장의 성과들이 나올 때 적용하는 게 맞다.

-자치경찰제 기능 강화와 확대 요구에 대한 입장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 자치경찰 논의 부서를 다시 살리는 중이다. 제주도가 실험한 자치경찰이 실제 우리에게 얘기한 본 모습이고 다른 시도의 시범 실시는 무너진 자치경찰이다. 제주 경찰은 대부분 행정과 일원화돼 있고, 업무 몇 가지만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다른데, 예를 들어 교통이 자치경찰로 떨어져 지방 정부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안전도 높아진다. 학교에 경찰관이 배치가 돼 그것만으로도 학교 폭력이 확 줄고 한다. 조만간 지금의 반쪽짜리 자치경찰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위원장 취임 후 성과와 방향은.

△당장 할 수 있는 지방에 대한 지원들은 신속하게 추진했다. 특히 지방에 대한 우대 정책들,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멸 위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특별 지역, 우대 지역, 일반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 각종 수당과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도 대폭 확대했고, 각 부처 공모 사업들도 통합 공모로 간다. 균특회계가 전체 15조였는데 이번에는 22조로 늘리고 그 안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이 38조였는데, 그걸 10.6조로 대폭 늘렸다. 5극 3특이라는 정책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권역별로 펼치는 것이다. 정책의 로드맵을 지난해 9월 30일 정부 정책으로 확정해 권역별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 말씀.

△지역마다 관심이 되게 높다. 윤석열·문재인 정부 모두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됐다. 두 가지 원칙으로 추진한다. 하나는 권역별로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한다고 하는 확실한 방침이 있으니까 그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들은 그 권역에 가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인데 100% 완성된 도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 확실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다. 전수조사는 작년 연말까지 끝났다. 국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

AI인프라 지방 확대…‘5극 3특’ 균형발전 전기
초광역단체 만들어 권역별로 선택·집중 투자
재생에너지 분야와 결합한 AI, 광주·전남 강점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성장엔진 육성

